

# 달아오른 조국정국... '국회 동의없는' 17번째 장관되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與 “정치공세 점입가경” 반발  
野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난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가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데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제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혀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 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

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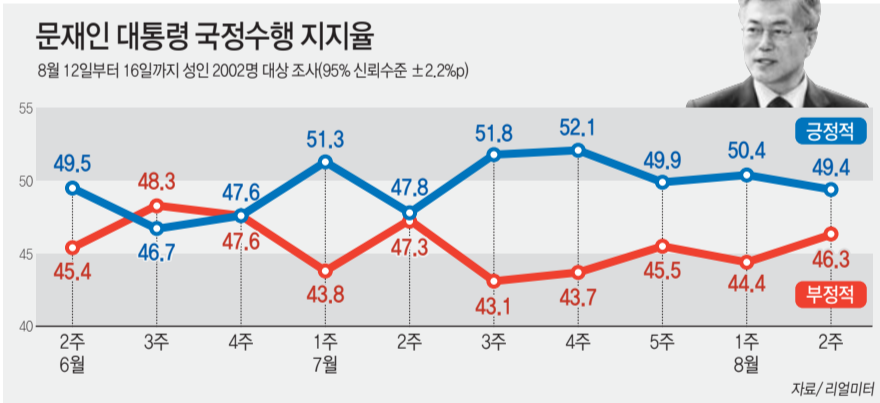
◆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총돌 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文 지지율 49.4%... 北 대남 막말에 하락

지지율 1.0%p ↓ 부정평가 1.9%p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대남(對南) 막말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 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4.1%)'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46.3%다.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초반 때 발생한 북한의 대남 막말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요란스럽게 짚어대는 게"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전날(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 대통령 경축사를 향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라며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 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0.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7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승준 기자 dn1114@

## 文대통령 “평화경제, 韓 미래 핵심이자 기회”

북한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중지부  
수보회의서 평화경제 중요성 부각

북한이 대남기구를 활용해 '평화경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신랄하게 비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복절 경축사 논쟁의 중지부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이 과제는)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는) 남북간의 지렛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사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수보회의 때 '광복절 경축사'와 '평화경제', '역지사지' 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신랄하게 비난한 문 대통령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남조선 당국자가 최근 북조선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니,

북조선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고 하면서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 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했다.

조평통은 "(이러한 시점에서) 버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게 의문스러운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